

# 강기정-이용섭 단일화 이번 주말 1차 고비

20일 전주, 21일 광주·전남 합동토론회 앞두고

양측 점점 못찾아...지역 정치권 우려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회가 중반전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북구 갑), 이용섭(광산 을)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에는 전북, 21일에는 광주·전남지역 합동 연설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두 후보가 단일화 담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과 함께 단일화 불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이용섭 후보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일화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도 호남 정치력의 복원을 위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부응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단일화가 늦어진다면 서로의 지지층 흡수에 어려움이 있어 시너지 효과도 얻기 힘들다”며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단일화 방법과 관련, “이미 제안한 바 있듯이 당 대표 경선 룰과 같은 대의원 50%, 권리당원 30%, 일반당원·시민 20%의 여론조사 방식이 적절하다”며 “강 후보가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상황으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강 후보가 단일화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강기정 후보는 “마치 내가 단일화에 미온적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단일화는 해야 되고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당초 당 대표 후보 등록 전에 이용섭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지금 밝히기는 어렵지만 후보 등록 이전에 이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결국 후보 등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일단 후보 등록을 했으니 단일화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합동연설회와 TV 토론, 공보물 등 두 사람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용섭(오른쪽)후보와 강기정 후보가 17일 세종시 흥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합동연설회에 참가해 김한길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경선 룰에 대해 강 후보는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경우, 명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며 “(경선 방법은)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후보의 단일화가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우려도 깊어가고 있다. 당권 확보 여부 등 승패를 떠나 모처럼 이뤄진 ‘광주의 도전’이 단일화 실패로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호남 정치력 복원을 기대했던 호남 민심에 반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가 걸어진 길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단일화 불발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화 실패가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 두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중에 후보단일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한 28일 이전에 후보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초선, 당대표 지지 후보 도출 실패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 없어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17일 두 번의 투표 끝에 결국 5·4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지 후보 결정 조건이었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혁신 초선 의원들이 당의 혁신을 위해서 혁신 과업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지지후보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지 후보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처음 33명의 초선 의원으로 시작했던 당 혁신을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전대 이슈를 대신 패

배 책임론에서 당의 혁신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전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등을 제외하고 이날 오후 나머지 두 명 후보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초선 의원들은 모두 18명으로 이날 특정 후보 지지 결정될 경우 전대 판세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됐다.

반면, 대부분 친노 성향인데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상당수여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안철수 안개행보’...민주 속앓이

‘입당이나 창당이나 입장 밝혀라’ 압박

4·24 서울 노원 병 보결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고민의 핵심은 안철수 후보의 당선과 그 이후의 행보다.

안 후보의 국회 진입은 곧바로 새 정치의 등장과 함께 안철수 신당론의 구체화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된다면 오는 10월 재·보결선거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공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야권 재편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양당 구도를 이룬 민주당으로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안 후보가 당

선된 뒤 입당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대선 이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온 당으로서 엄청난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의 경쟁을 통해 당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수권 정당’의 꿈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안갯속이어서 민주당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에만 해도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듯한 인터뷰를 했다. “정당 입당을 말한 적도 없고, 현재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서둘러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안 후보를 향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레이제결정지 하자 의혹 증폭

호남고속철도 공사 수정 필요

민주당에서 계속되는 부품 질소 사고로 제품 하자 의혹을 받고 있는 파손된 레이제결정치를 납품사가 교체 후 전량 회수해 간 것으로 밝혀져 향후 정밀 검사 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17일 철도 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품 하자 시 무한 책임을 갖게 되는 수입납품업체가 교체 후 문제 부품을 모두 회수해 간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도 있다”며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공사를 전면 수정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증거들”이라며 해당 부품을 조속히 수거해 관계당국이 보관할 것을 주문했다. /최권일기자 cki@r

## 여야정협의회, 추경예산안 첫 논의 ‘민생추경’ 공감하면서도 與野 이견 커...난항 예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회’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추경의 내용과 목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추경안 국회 처리의 난항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정은 서민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민주통합당 측은 정부의 추경안이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추경은 급박하고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마련했다”며 “추경이 경제에 마중물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정부의 추경안은 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추경안에 학교식물 안전관리, 농산물 유통개선 등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이행 추경’이 아니냐”며 “서민 경

제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세출예산 규모도 너무 작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번 추경은 (정부와 여당의 말처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진정한 마중물을 위해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자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욱 의원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야당과 잘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세입 추경을 축소하고 세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의장은 회의에서 “17조 3000억원을 추경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밖에 안 된다”며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 정치권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입 경정 12조원과 세출 경정 5조3000억원으로 구성된 정부의 추경안을 ‘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하는데 여야가 공감할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임기중 국회의원직 박탈”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심작하게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통상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정국경색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내각제에선 내각수반인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여야 극한대립으로 국회와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선공약으로 검토했으나 ‘남용시 정당정치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닥쳐 최종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요리  
하는남자

**이**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OPEN**

출직원 | 주방직원 | 파트타임어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집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

**매 매**

→ 대 475㎡, 건1447㎡, 2004년 신축  
→ 6층건물, 엘리베이터 2대  
→ 매매가 14억 5천만원  
→ 분할매매 가능

**목 2호광장 사거리  
포구, 맹수 한의원 건물**

**임 대**

→ 6층건물, 각층㎡(110)  
→ 6층 고급주택, 옥상 광고탑  
→ 병/의원, 약국, 교회, 커피숍  
체인점, 편의점, 식당, 학원 등

예약상담 H. 010-3605-5000

**부동산경매**

▶반토막 난 부동산! 지금이 찬스!  
▶노후 대책은 부동산 경매로!  
▶경매비법 배우면서 투자!  
▶단독/공동/소액투자 가능!  
▶낙찰물건 실전 사례 교육!  
▶1인1물건 추천

■강의기간 3개월, 주1회  
■강의시간 매주 금요일(저녁7:30~9:30)  
토요일(오후5:00~7:00)  
■강의장소 광주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강 의 료 개인 1,100만원, 팀 550만원

**NPL, 특수물건전문**

예약상담 H. 010-3605-5000

**(주) 오천경매**